

보험·연금

의무는 요양기관에 지웠는데 왜 공정위가 점검하나

연계를 실제로 하는 업체에는 의무 대신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연계 통계와 보험업법 시행령을 대조해 요양기관·보험회사·EMR업체에 배치된
의무와 수단을 구분했습니다.

발행

2026.08.19

연번

2026_42

읽는 시간

6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연계율을 의료계의
선택이 아니라 규율 수단의 선택에서 비롯한 결과로 본다.
전송 의무를 진 상대는 요양기관이고,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의무를 진 상대는 보험회사다. 연계 작업을 실제로
하는 전자의무기록 업체에는 의무 대신 인센티브와
공정거래위원회 점검이 배치됐다.

확정된 사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2024년 10월 병원급부터 시작됐고 2025년 10월 의원·약국으로 확대됐습니다. 2026년에도 미연계 요양기관이 더 많습니다.

항목	확인된 내용	비고
가입자	4,035만명	실손의료보험
전체 요양기관	104,925곳	2026년 4월 1일
연계 요양기관	29,849곳	연계율 28.4%
7월 연계율	40.4%	2026년 7월 30일 기준
전송 의무	요양기관	환자 요청이 전제
시스템 구축	보험회사	중계기관 이용 가능

2026년 4월 1일 기준 전체 10만 4,925개 요양기관 가운데 2만 9,849곳이 전산시스템과 연결돼 연계율은 28.4%였습니다. 7월 말에는 40.4%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의 요청에 따라 서류를 전자 전송해야 합니다. 다만 시스템 연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인가

보험업법과 시행령은 요양기관에 서류 전송 의무를, 보험회사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둡니다. 환자가 실손24 등으로 요청해야 전송이 시작되고, 진료기록 전체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청구서류가 대상입니다.

병원 프로그램과 중계시스템을 실제 연결하는 전자의무기록(EMR)업체에는 보험업법상 직접 연계 의무가 없습니다. 정부는 비용 인센티브와 지원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방해·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따라서 연계 지연을 모두 요양기관의 불이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요양기관이 연계 신청을 했어도 EMR업체 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환자는 종이·사진 제출 등 기존 절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4월 1일 기준 단순 계산하면 7만 5,076개 요양기관이 미연계 상태였습니다. 이곳을 이용한 환자는 전산청구가 바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계기관에서도 환자가 전송을 요청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심사와 지급 여부는 별개입니다. 전산화는 서류 이동 방식을 바꾸는 것이지 보장범위나 면책사유를 바꾸지 않습니다.

민감한 건강정보가 보험회사로 이동하므로 환자가 어떤 서류와 보험회사에 전송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송 오류·오인 수신 때의 정정과 삭제 절차도 필요합니다.

전체 요양기관	104,925곳	2026.4.1
연계	29,849곳	28.4%
미연계	75,076곳	단순 차감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미연계 완료 시점 EMR업체별 작업 일정이 공개되지 않아 개별 요양기관의 연결 완료일을 환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02 정당한 사유의 종료 연계 진행 중이라는 사유가 어느 기간까지 인정되는지 구체적인 기준과 점검 결과가 필요합니다.
03 공정위 점검 결과 연계 지연에 거래방해나 과도한 비용 요구가 있었는지 조사 결과가 공개돼야 합니다.	04 오전송 구제 다른 보험회사·계약으로 잘못 전송된 건강정보의 정정·삭제·통지 절차를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할 일

- 국민
- 진료 전 실손24에서 해당 병원·약국의 연계 여부를 확인하고 미연계면 기존 청구서류를 챙깁니다.
 - 전송 요청 화면에서 보험회사·계약·서류 범위와 전송 완료 결과를 저장합니다.
 - 전산청구 뒤에도 보험금 접수번호와 추가서류 요청, 지급결과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대상회사
- 요양기관과 EMR업체는 연계 신청일·예정일·지연사유를 환자가 볼 수 있게 표시합니다.
 - 보험회사는 오전송·중복전송 때 정정·삭제 접수창구와 처리결과를 알립니다.

- 당국
- 기관·EMR업체별 연계율과 평균 처리기간을 공개하고 장기 미연계 사유를 구분합니다.
 - 공정위 점검 결과와 정당한 사유 인정기간, 환자 정보 오전송 구제 절차를 표준화합니다.

· EMR업체별 연계 완료일과 공정위 점검 결과, 장기 미연계에 대한 후속 규율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니다.

A

자율 연계 가속

B

연계 격차 고착

· 실손24의 월별 연계율, EMR업체별 완료기간과 공정거래위원회 점검결과를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4개의 연결 지식

금융상품 5세대 실손보험

피해구제 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금융제도 개인정보 동의

피해구제 자료열람요구권

확인한 사실·숫자 6건

6 확인 항목	5 1차 자료	1 파생 계산	월별 확인 추적 예정
------------	------------	------------	-------------------

1차 발표기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파생 1차 자료의 수치를 이용한 계산

01	1차	104,925개 요양기관 중 29,849곳 연계, 연계율 28.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6년 4월 자료	원문 열기 ↗
02	1차	실손보험 가입자 4,035만명과 전산청구 확산 지원 관계기관 2026년 4월 15일 발표	원문 열기 ↗
03	1차	병원급 1단계와 의원·약국 2단계 시행 일정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자료	원문 열기 ↗
04	1차	요양기관의 서류 전송과 보험회사의 시스템 구축 의무 보험업법 및 시행령	원문 열기 ↗
05	1차	민감정보 처리와 정보주체 권리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 열기 ↗
06	파생	4월 1일 미연계 요양기관 75,076곳	계산식

추적 예정	실손24 월별 연계율, EMR업체별 처리기간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점검 결과를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공개 연번을 실제 게시 순서에 맞춰 NB-2026-042로 바로잡고, 4월 기준 통계와 7월 후속 연계율을 기준일과 함께 구분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연구소의 분석이며 관계기관·보험회사·요양기관·EMR업체의 공식 입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전산청구 가능 여부와 보험금 지급은 기관 연계상태·계약·진료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